

특/별/대/담

북핵 현실과 한반도 공존 전략: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의 문제의식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은 변화한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핵, 동맹, 평화, 통일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대담은 북한 핵 문제의 현실, 남북관계의 재구성, ‘좋은 담장 좋은 이웃’ 구상, 통일 담론의 재검토, 자립형 동맹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담은 조동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대담자의 동의를 얻어 주요 내용을 정리·수록한다.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5일(목), 16~18시, 송민순 前 외교통상부 장관 연구실

사회

조동호(KDI)

대담

송민순(前 외교통상부 장관)



조동호: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송민순 장관님께서 최근 출간하신 『좋은 답장 좋은 이웃』을 계기로, 변화한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화, 통일, 동맹, 그리고 북핵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다시 사유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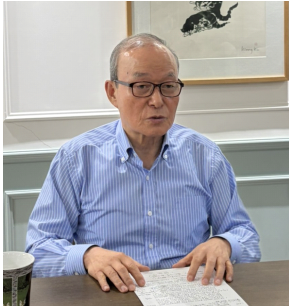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대남관계의 성격 자체를 재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제질서를 관리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중리 협력의 강화, 그리고 국제질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가 겹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한층 더 복잡적이고 엄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이라는 기존의 언어와 정책 틀만으로 현재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아가 미래를 위한 실효적 해법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대답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 핵 문제의 고도화와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안보의 최종적인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입니다. 둘째, 장관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답장, 좋은 이웃’이라는 구상, 곧 남북이 경계와 계산이 분명한 정상적 이웃으로 공존하는 방안이 어떠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판단 위에서 제기된 것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셋째, 통일을 당장의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접근방식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차가운 평화’, ‘전략적 자율성’, ‘자립형 동맹’과 같은 개념이 한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대답이 단순한 저서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어떠한 언어와 프레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지 함께 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장관님의 문제 제기를 차분히 듣고,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도 병행하면서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책을 쓰시게 된 문제의식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님, 2016년에 펴내신 『빙하는 움직인다』가 과거에 대한 외교 회고록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이번에 출간하신 『좋은 답장 좋은 이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안보·통일 분야의 국가전략을 담은 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거를 정리한 뒤에는, 바뀐 현실 속 미래의 길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가 지난 과정을 정리한 책이었다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길을 다시 생각해 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고록을 마친 뒤부터, 과거를 정리했으니 이제는 변화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한번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구체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북한이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이후 판문점, 싱가포르, 하노이로 이어지는 과정이 전개되었지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제가 회고록을 쓸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북핵, 한미동맹, 남북관계, 미중 경쟁이 서로 깊이 얽혀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정책 경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계통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뜻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동호: 이번 책은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안보와 분단을 바라보는 감각 자체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금 한국 사회의 안보 인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송민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군 이래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풍요와 혼란이 공존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국민이 그날그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는 그 실상을 체감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국민이 나라의 안전이 위협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어야겠다고 판단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많은 민주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쟁 위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는 세 가지 징후가 함께 나타납니다. 무감각과 피로감, 그리고 무력감입니다. 위험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너무 오래되어 지쳐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꿀 힘이 없다고 생각해 체념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마치 설탕 발린 화약통을 입에 물고 그 달콤함을 즐기면서,

어디까지 깨물어야 화약이 터질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북핵, 미중 경쟁, 미국의 역할 변화 같은 구조적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책 대안의 제시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안보 감각 자체를 다시 일깨우자는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조동호: 결국 장관님 책의 앞부분은 한국 안보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한국을 보호할 것인지, 북핵 현실 앞에서 우리의 최종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평화·통일 담론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하나하나 따져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뒤에 나오는 ‘좋은 담장 좋은 이웃’ 역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앞선 질문들에 대한 장관님의 종합적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좋은 담장’과 ‘좋은 이웃’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담장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송민순: 남북관계는 이제 경계와 계산이 분명한 관계 위에서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존의 질서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담장’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선이 분명하고, 넘어가고 오고 할 때의 절차가 분명하며, 무엇보다 서로 주고받는 계산이 분명한 관계를 말합니다. 담장이 흐릿하면 기대와 오해가 커지고, 결국 갈등과 충돌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담장이 분명하면, 그것은 단절의 장치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 장치가 됩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적대와 긴장이 지속되는 상태보다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좋은 이웃입니다.

조동호: 장관님께서도 기존 남북관계를 ‘좋은 담장’이 아니라 ‘흐릿한 담장’이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릿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송민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지나치게 흐릿한 담장이었습니다. 휴전선의 철조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흐릿했다는 뜻입니다. 남북을 특수관계라고 하면서, 주고받는 계산도, 기대도, 책임도 흐려졌습니다. 서로 어떤 원칙 위에서 관계를 유지하는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경계이고 어디서부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안정되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정해집니다. 기대는 커지고, 오해도 커집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실망과 충돌이 반복됩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결국은 경계와 절차, 책임과 계산이 분명한 구조 위에 서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조동호: 그런데 담장이라는 것은 상대도 함께 인정해 주어야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명히 하려 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순: 그 점을 많이들 말씀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경계가 흐릿해진 데에는, 우리가 남북을 오랫동안 특수관계로 다루어 온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동포라는 인식 아래, 국가 대 국가 관계라기보다는 특별한 예외관계처럼 접근해 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와 계산, 책임과 기대가 모두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누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역시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동맹과 안보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미국은 동맹마저 거래의 관점에서 다루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계속 처리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성격과 질서를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는 명분으로 남길 수 있어도, 더 이상 현실적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동호: 장관님 책의 12개 질문 가운데, 결국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일각에

서는 “한국 안보에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하기도 하더군요.

송민순: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결국은 한국 안보에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의존형 동맹을 넘어 자립형 동맹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안보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축이 교차하는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북핵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과 최종 결단에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넘어, 북핵 현실 아래에서 한국이 자기 안보의 주제로 설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동맹은 12개 질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동호: 장관님께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설계에 깊이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런 장관님께서 오늘날 ‘한반도 비핵화’를 사실상 허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일종의 자기부정 아니냐는 비판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송민순: 그와 같은 질문은 2018년 이후 강연이나 토론 자리에서 자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자주 인용해 왔습니다. 하나는 케인스의 말입니다. “사실관계가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뀐다.” 또 하나는 빅토르 위고의 명언으로서 “견해는 바꾸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꾼 것은 평화에 대한 원칙이 아니라, 그 원칙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과거에는 비핵화가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었다면, 오늘의 현실은 그 가능성이 현저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유지하되 경로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동호: 장관님의 문제의식은 “북핵을 상수로 인정하고 현실적 방정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사고의 전환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송민순: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외교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미국·중국·러시아 모두 사실상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부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북한 핵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핵화는 안정, 평화, 통일, 번영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의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조동호: 장관님의 경력을 생각하면, 일종의 ‘자기변명’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장관님께서서는 북한이 왜 그렇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송민순: 북한에 있어 핵무기가 가지는 효용은 매우 큽니다.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정권 안정의 장기적 기반이 되고, 안보 차원에서는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대남, 대미, 대중, 대일 관계에서는 협상 자산이 되고, 외화 획득과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할 이유보다 핵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이 겹쳐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그보다 더 심각한 요소는 핵을 포기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체제와 정권의 생존 위험입니다. 최근의 이란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전의 이라크와 리비아의 경우가 북한에는 너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는 예측 가능한 장래에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경제제재 문제도 함께 여쭙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제재가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제재를 계속 유지할 실익이 있느냐는 질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송민순: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풀어도 되느냐 하면,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하나의 고리를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분명한 압박의 장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재를 풀어 주는 순간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제재까지 해제되어 대외무역과 경제활동의 폭이 다시 넓어지면, 그것은 핵 보유 체제를 더욱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제가 흔히 비유하는 ‘독버섯’이 그냥 버섯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제재를 해제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리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칙과 명분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돌발적 선언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방향 전환의 공개적 표현입니다.”

조동호: 장관님께서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 역시 최근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라, 오래 축적된 흐름의 공개적 표현으로 보시는 듯합니다.

송민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 갑자기 등장한 구호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북한 내부 담론에서 ‘혁명’이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은 원래 조선반도 전체를 혁명으로 통일한다는 뜻을 내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용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혁명을 통한 통일에 대한 능력이나 의지가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결국 핵무기 개발이 완성된 이후 2023년에 이르러 ‘두 국가론’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남한을 같은 민족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규정함으로써, 체제 보전을 위한 내부 통치를 더 용이하게 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통일을 전면에 내세울수록, 오히려 통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길로 정리된다고 보아야 하겠군요. 먼저 그 구도를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왜 장관님께서 ‘세 번째 길’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순: 크게 보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에 더욱 의존하면서 군사적 억제에 무게를 두는 길입니다. 둘째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라는 세 트랙을 계속 추진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길입니다. 셋째는 한반도의 현 상황이 예측 가능한 장래에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단은 남북이 갈등 속에서도 정상적인 이웃으로 공존하는 질서를 관리하면서 먼 미래를 도모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셋 가운데서 지금 단계에서는 세 번째 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동호: 북핵에 대한 현실 인식의 변화가 결국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틀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남북이 어떤 관계를 목표로 삼아야 하느냐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것은 ‘정상적 이웃’으로 공존하는 세 번째 길이라고 보아야 하겠군요.

송민순: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 번째 길은 다른 길들을 모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도 필요하고, 북한과의 소통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남북이 당분간 서로를 바꾸려 들지 않고, 경계와 계산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안정과 공존의 질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저는 ‘정상적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관계를 과도하게 상정하거나, 반대로 굴복과 흡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 간 관계처럼 선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되,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질서 말입니다.

조동호: 장관님께서서는 토머스 셸링의 논의를 인용하시면서, ‘적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대북정책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송민순: 저는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얻느냐, 북한을 더 많이 누르느냐, 혹은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하는 식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셸링의 문제의식은 그런 접근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압도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기보다, 한국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정책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운용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다 현실적인 의미의 성과이자, 대북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송민순: 저는 통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조건에서 통일을 전면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안정적 공존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북한과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서, 소극적이거나 안정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면 북한은 그것을 결국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 더 정확히 말하면 흡수의 언어로 받아들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여지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통일을 앞세우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중단기적인 국가 성장과 장기적인 통일 비전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을 쟁취의 목표로 내세우기보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결과로 보자는 뜻입니다.

조동호: 다만,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이 쉽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더라도, 분단국가로서 통일 담론마저 약화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비록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인데요.

송민순: 저는 통일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통일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통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의식 속에서는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모든 정책을 거기에 종속시키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안정과 공존의 질서를 관리하면서,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가 장기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동호: 그런데 장관님께서서는 동시에 북한 체제 안에 ‘붕괴의 씨앗’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 체제가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 결과로서 통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송민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 다시 말해 체제 내부의 ‘붕괴의 씨앗’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언젠가 발아해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온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 변수가 무엇보다 큼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곧 붕괴하느냐 아니냐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붕괴하든 붕괴하지 않든 어느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합리적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차가운 평화’의 질서입니다.”

조동호: 결국 장관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가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정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막는 수준의 안정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차가운 평화’는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을 전제로 한 관리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민순: 한반도의 현재 조건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지금은 ‘적극적 평화’나 ‘따뜻한 평화’를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 필요한 것은 안정적 긴장 관리, 다시 말해 ‘차가운 평화’입니다.

저는 이를 대북 억제 태세 위에서, 긴장 완화와 위협 축소를 병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통일을 향한 어떤 접근에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기의 조건에 적응하면서도 언젠가 올 수 있는 우기의 기회를 잡을 능력과 태세를 갖추는 초월의 생존과 변성 방식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차가운 평화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조동호: 과거에는 ‘따뜻한 평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민순: 적어도 두 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으로 이어진 10여 년 사이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흐름을 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남·북·미중 어느 누구도, 각자의 국내정치적 장애와 유혹을 넘어 그 다리를 건널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역사는 핵 문제라는 독버섯이 자라나는 대립의 계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동호: 다만, 비판적으로 표현하자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적 이웃’과 ‘차가운 평화’ 구상은 지나친 ‘낙관적 편향’이거나 ‘순진한 기대’라는 느낌도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공존의 구조를 관리하면, 북한 내부의 경계심과 통제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송민순: 저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북한이 바뀐다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견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자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북한은 주민 통제와 정보 차단을 더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안정적 공존의 구조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내부 통제와 경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적 확신이 아니라 상대적 가능성의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존형 동맹을 넘어, 한국이 운전대를 잡는 자립형 동맹으로 가야 합니다.”

조동호: 책의 흐름으로 보면, 이러한 현실 인식은 결국 자립형 동맹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핵 현실을 상수로 두고,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한국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 공간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여론, 그리고 중국·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송민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핵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국제정세, 미중러 관계, 미국 국내정치와 여론, 그리고 당시 백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의 최종 결단에만 의존해 설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볼이 포수 뒤로 넘어가더라도 잡아주는 backstop(뒷그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동호: 미국의 핵우산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송민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지 자체를 전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동일한 강도로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 자신의 역량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한국군이 자기 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능, 즉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핵 현실 아래에서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핵잠재력, 특히 우리나라 농축과 같은 핵연료주기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전통제권과 핵잠재력이 한 쌍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동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립형 동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민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안보 버스는 미국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한국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립형 동맹은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버스에서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한국의 주도성과 책임이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핵추진잠수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국내에서는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송민순: 핵추진잠수함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중하고 본질적인 과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매우 비싼

체계입니다. 한국의 해양환경과 국방재정 구조를 감안하면, 같은 예산으로 다른 전력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은 결국 연료입니다. 우라늄 농축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플랫폼 자체만으로는 전략적 자립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흔히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핵추진잠수함 자체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잠수함 그 자체보다 핵연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익숙한 말과 오래된 관성에서 벗어나, 현실 위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조동호: 오늘 말씀을 들으며,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이 단지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하는 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보와 분단,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재정립하자는 문제 제기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얼마나 번영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못지않게, 얼마나 위험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도 직시해야 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은 매우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또 통일을 지금 당장의 쟁취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권 상실과 분단의 역사 앞에서 바깥의 누구를 탓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자책이 아니라 자강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강조하신 자립형 동맹, 좋은 담장, 차가운 평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문제의식은, 익숙한 언어로는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 지금 한국 사회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던져 준다고 봅니다. 책에서 말씀하신 “국가의 안보 정책은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감’을 제공해야 한다”, “70년 이상 지속된 실존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은 안보 위기를 정치 도구화하는 데 익숙해졌다. 보수는 위기의 등장을 부각시킴으로써, 진보는 위기의 해소에 대한 희망을 부각시킴으로써 득표에 활용해 왔다”는 지적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송민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바랐던 것도 결국 비슷한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국가적 공감의 창이 조금이라도 넓어졌으면 합니다. 익숙한 말과 오래된 관성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오늘 대담은 바로 그 공감의 창을 조금이나마 넓혀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그 현실에 압도되지도 않으면서 한국이 어떤 언어와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장관님께서 던져주신 문제의식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진지한 토론과 성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